

미래의 목표와 방향,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보문화운동은 국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정보화, 정보문화를 인식시키는 결과를 거두었다. 정보문화운동의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정보화정책 및 정보문화운동을 반성·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 및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여 이에 맞는 진취적이고 다각적인 정보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진일/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정보통신서비스 대중화 정착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정하여 정보문화운동을 전개한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0년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정보화에 대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의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 그 격차가 크긴 하지만,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초등학교의 인터넷 교육 열풍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0년 전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정보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 26.6%에서 1994년 86.8%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보화, 정보문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전화가입자수는 2천만명을 넘어섰고 1가구 2회선 시대를 맞이하였다. 10여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또한 PC 보급은 600만대를 돌파

하였다. 이는 1993년보다 약 2배 늘어난 수치이고, 보급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386, 486에서 펜티엄급으로 그 기종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제 곧 1가구 1PC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PC나 PC통신을 다룰줄 모르고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무선호출 가입자는 1천만명을 넘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411만명을 넘었는데 이 중 CDMA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CT-2가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연내에는 PCS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이동전화시대, 디지털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전 정보통신업계의 큰 관심속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로써 시내전화, 시외전화를 비롯한 5개 통신분야가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98년 이후 정보통신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자유경쟁체제가 형성되어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요금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의 대중화가 정착될 전망이다.

이처럼 지난 10여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기술과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보활용능력이라든지 대응수준은 정보통신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1996년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생활 정보화 의식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정보처리 실태를 보면, 문서작성에 있어 손으로 쓴다는 응답자가 79.3%였고, 수첩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를 관리한다는 응답자가 85.9%로 나타났다. 즉 컴퓨터나 타자기, 전자수첩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2.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4%,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5%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그 이전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지만 우리의 정보화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수치로 보여진다.

각 분야 정보화 빠르게 발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지표'를 가지고 199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한국의 8.3배, 유럽은 5.5배, 일본은 3.6배, 싱가포르가 4.3배, 대만이 1.1배의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조사기관 IDC와 WORLD TIMES가 발표한 '정보규범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하였고, 4개의 분류그룹 중 제2위 그룹인 '뛰는 국가형(strider)'으로 분류되었다.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의 현재까지 정보정책, 정보통신산업과 기술,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정부주도하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민간주도의 정보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988년 범국민 정보문화확산사업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정보화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선도를 위해 '정보문화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정보문화운동은 통신사업자, 학계, 언론계, 기타 민

〈표〉 국민들의 정보문화 인식도 현황

구 분	1986	1988	1990	1992	1994
정보문화 인식도	26.6%	35%	47%	76.5%	86.8%

간단체들의 다양한 홍보와 계몽활동을 통해 오늘날까지 활발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문화, 정보문화운동은 어떤 의미이며,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정보문화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과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의 활용의지를 나타내는 가치관과 규범, 행동 등의 제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정보문화운동은 첫째, 의식적, 문화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정보통신윤리와 규범을 정립시키는 운동이고 둘째, 도구적, 행동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능력을 제고시키고 정보 이용능력을 고양시키며, 나아가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운동이며 셋째,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화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정보화 추진에 저해 요인이 되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정보문화운동은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다.

지난 10년간의 정보문화운동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정보화마인드 조성기('88~'91), 정보문화운동의 전국적 확산기('92~'95), 정보문화운동의 심화기('96~)로 나눌 수 있겠다.

1단계는 국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조성하여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간이었고, 2단계는 지역정보화운동을 통해 정보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간이었으며, 3단계는 정보통신부의 출범과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부처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정보화에 대한 노력으로 인한 정보화의 대중화를 통해 정보문화운동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기의 정보문화운동은 국민들에게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사회를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 1988년 이래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제정하여 각종 강연회, 세미나, 전시회, 시상식 등의 행사를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매년 많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고, 참여인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정보문화운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정보화, 정보문화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90년대 초·중반에는 농어촌컴퓨터교실과 같은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과 같은 지역정보화사업과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중점을 둔 정보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보문화 운동 심화시킬 때

앞에서의 구분에 따르면 현재는 정보문화운동의 심화에 속한다. 10여년간 추진되어온 정보문화운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여, 잘 다져진 기반 위에 정보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정보문화운동을 심화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 앞으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문화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바로 세워, 다각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보문화운동은 국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정보화, 정보문화를 인식시키는 결과를 거두었다. 정보문화운동의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정보화정책 및 정보문화운동을 반성·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 및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여 이에 맞는 진취적이고 다각적인 정보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관련 기관들의 조화와 협력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기타 정부기관, 학계, 언론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큰 이슈가 되어 왔던 언론기관들의 정보화운

동과 같이 범국민적인 정보문화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 농어촌컴퓨터교실과 같은 컴퓨터교육장을 확대 운영하고, 대학이나 정보통신교육기관들의 무료 컴퓨터강좌를 늘리며, 정보문화홍보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늘리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정보화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장애인, 노령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에도 힘써야 한다. 각 지역의 정보화는 지역간·계층간의 경제 및 정보의 격차를 없애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서로의 문화적인 교류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정보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바른 지역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역정보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문화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정보문화정책이 필요하고 '복지정보통신'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몇년동안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의 오용이나 컴퓨터 범죄, 음란물 유통 등 정보통신윤리와 규범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윤리교육과 함께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법안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고도정보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보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국민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정보문화운동을 통한 바람직한 정보문화를 꽃피워야 한다. 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보선진국이 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과 함께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DC**